

# 올해부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신고 안하면 가산세 낸다

###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도 사업자등록해야...2월10일까지 사업장신고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맞아 고소득임대업자 세무검증 강화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가 실시된다. 과거 신고대상 아니었던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가산세 폭탄을 피

할 수 있다.

7월 국세청에 따르면 월세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임대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부부 합산 기준 1주택자의 월세와 2주택자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과 해외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가 이뤄진다.

올해부터 전면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가 이뤄지며 2014~2018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2019년 12월31일 이전에 주택임대대를 시작하고 올해에도 계속해서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 올해 1월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개시일로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된다. 2019년 12월31일 이전 임대를 시작했다면 올해 1월1일을 임대개시일로 보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지난해까지는 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만 소득세 신고대상이었으나 올해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며 2000만원 초과는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등록을 모두 할 경우 임대소득세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에서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임대소득세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때 필요 경비와

기본공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세금을 감면받을 수도 있다.

총 임대수입금이 2000만원이며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때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사업자등록을 한 A씨(8년 이상 장기임대의 경우)와 한 쪽만 신고한 B씨가 있다면 A씨의 경우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해 1200만원이 공제되며 기본공제도 400만원 받을 수 있지만 B씨는 50% 경비율만 적용돼 1000만원과 기본공제액도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하면 A씨와 B씨의 과세표준은 각각 400만원, 800만원으로 2배 차이가 벌어지고 A씨는 여기에 75% 세액 감면도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A씨는 14만원의 세금만 부과되고 B씨는 112만원의 세금 폭탄을 안게 된다.

임대사업자는 또 2월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2019년도 주택임대실적분 수입금액과 임대물건의 소

제지, 계약 조건 등의 사업장 현황 신고도 해야 한다. 사업자 현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15일부터 사업자 현황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지정일에 방문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납부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6월30일까지 납부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안내와 함께 사업자의 자진신고 후 탈루 혐의가 큰 고가주택, 다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수입금액 검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입금액 검증 과정에서 탈루사실이 명백하고 큰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하는 등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 설 상여금 지급계획, '대기업 90% vs 중견중소 50%'



기업 10곳 중 6곳이 이번 설에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인 가운데, 대기업과 중견·중소 기업의 지급 여부와 금액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은 7일 기업 687개사를 대상으로 '설 상여금 지급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

과를 통해 응답 기업의 55.5%가 '지급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2.6%p 증가한 수치다.

상여금 지급 여부는 기업 규모 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우 91.4%가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인 반면 중소기업

54.2%, 중견기업 50%로 절반 정도에 머물렀다.

지급 금액도 차이가 있었는데 대기업은 134만원, 중견기업 118만원 중소기업의 평균 상여 금액 차이는 1.7배였다. 응답 기업의 1인당 평균 상여금은 88만원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은 상여금을 지급하는 이유로 '직원들의 사기와 애사심을 높이기 위해서'(54.3%,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이밖에 '정기 상여금으로 규정돼 있어서'(39.1%), '설 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9.4%), '지난해 실적이 좋아서'(6%) 등이 이유로 꼽혔다.

반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306개사)들은 그 이유로 '선물 등으로 대체하고 있어서'(37.9%,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명절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어서'(32.7%), '재무상 태 약화 등 지급 여력이 부족해서'(25.2%), '불경기 등 내외부 환경이 어려워져서'(15.7%), '지난해 목표만큼 성과를 달성하지 못해서'(14.7%) 등이 있었다.

## "무·배·소고기 비싸" 설 상차림비 평년보다 오를 듯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 대책을 추진한다. 올해는 주요 성수품의 수급상황이 양호한 편이지만 출하량이 줄어든 무와 지난해 태풍 피해를 입은 배의 가격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전체 성수품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이 평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3주 앞둔 이달 3일부터 성수품 공급 확대하고 할인판매 등 소비촉진을 통해 농가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최근 농산물 도매가격은 지난해 태풍 피해로 작황이 부진했던 배추·무의 가격이 오르면서 높은 추세를 이어오다 같은해 10월 고점을 찍은 이후 하락 추세다. 하지만 설을 앞두고 공급량이 부족한 무와 배, 고급육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소고기를 중심으로 성수품 시세는 평년보다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품목별로 배추와 무는 태풍피해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설명절이 다가오면서 월동배추의 작황 회복으로 배추 수급은 양호하겠지만 월동무의 초기 출하량 감소로 무는 다소 높은 시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사과는 생산량과 대과 비중 증가로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배는 태풍 등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출하량이 줄면서 평년보다 높은 시세가 예상된다.

축산물은 전 축종의 사육이 늘면서 공급이 원활한 편이다. 돼

지는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대거 살처분이 이뤄졌지만 평년보다 사육마릿수가 많아 가격에는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수요가 많은 10대 품목의 공급기간을 2주에서 3주로 확대한다. 공급량도 23일까지 총 12만 100톤으로 평시 대비 33%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설을 앞두고 배추, 무의 수급이 불균형을 나타낼 경우 출하조절시설과 채소가격안정제를 활용해 즉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정인되고 풍요로운 광주

#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GWANGJU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에어컨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